

한국에 있어서의 民衆論

李 正 馥

(서울대학교)

〈目 次〉

- | | |
|-------------------------|----------------------|
| I. 1950년대 말 威錫憲先生의 民衆論 | III. 1980년대의 急進的 民衆論 |
| II. 1970년대 말 韓完相教授의 民衆論 | IV. 結 語 |

이 글에서는 1950년대와 60년대의 威錫憲先生의 民衆論,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 韓完相教授의 民衆論, 그리고 1980년대 초 이래의 急進的 民衆論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세가지 民衆論외에도 民衆文學論, 民衆神學論, 民衆教育論 등 여러가지 民衆論이 있으나 지면관계로 이들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기로 한다.

I. 1950년대 말 威錫憲先生의 民衆論

威錫憲先生의 民衆論에서 민중은 누구를 가리키고 그 민중론의目標은 무엇이고 그 實現方法은 무엇인가? 이러한 민중론이 나오게 된 時代的 背景은 무엇이고 그것은 한국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威先生의 민중론은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를 본고에서 자세히 다룰 수는 없으나 간단하게라도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威先生의 민중론에서 민중은 처음에는 누구보다도 중산층을 가리켰다. 그의 최초의 민중론적 글이라고 볼 수 있는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思想界」, 1958년 8월호)에서 그는 “민족국가, 경제에 있어서 자본주의 국가는 씨울 중에서도 중산층의 나라”라고 하면서 중산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¹⁾

그러나 1970년대 초부터 그의 민중개념은 어떠한 階層이나 階級이 아닌 순수한 民으로 변하였다. 그가 즐겨쓰는 씨울은 이러한 순수한 民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는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초에는 百姓, 民衆, 씨울을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로 혼동하였으나 1970년대초부터는 씨울이라는 말만을 사용하고 있다.²⁾

威先生은 지난 30여년간에 걸쳐 韓國政治의 非理와 모순을 신랄하고 용기있게 비판하고 씨울의 각성을 촉구하였다. 그는 자유당 정부를 비판하였고, 5·16후에는 이에 대한 반대 발언을 제일 먼저 하였다. 그 후 그는 韓日會談을 반대하였고 維新時代에는 維新體制의 철폐를 주장하였다.³⁾ 이러한 비판을 통해 그가 목표로 하는 바는 건전한 자본주의 경제에 기반한 민주주의국가, 민족국가의 수립이었다.

그는 이러한 목표의 實現方法으로 非暴力的이고 平和的인 抗拒運動을 주장하였다. 인도의 간디가 植民政府에 대해 벌였던 運動과 비슷한 運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데 있어 기독교 정신을 강조했다.⁴⁾

民衆論은 일반 民衆보다도 「思想界」를 구독했던 靑年 學生들을 비롯한 知識人들에게 가장 큰 호소력을 지녔었다. 1950年代 末과 1960年代 初의 그의 演說會에는 수천 수만의 聽衆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1) 「威錫憲 全集 14 :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서울 : 한길사, 1985), p. 111.

2) 그가 1970년대초부터 씨울이라는 단어만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위의 책, p. 199 참조.

3) 위의 책 참조.

4) 위의 책, p. 9.

勞働者, 農民들이 아니라 대부분이 中産層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의 民衆論은 기독교적 성격이 강했지만 教會라는 조직을 통해서는 그리 큰 영향력을 발휘한 것 같지 않다. 그는 원래 無教會主義者로서 教會라는 組織을 오히려 참 기독교정신의 함양을 압살하는 기구로 보았다. 그리하여 그는 오랫동안 아무 宗派에도 속하지 않다가 1960年代부터 組織性이 가장 약하고 無教會主義에 가까운 웨이커교의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그의 民衆論的 著述과 강연은 최근 19권의 「威錫憲全集」으로 出刊되었으나 그의 民衆論은 現在 知識人들에 대한 영향력에 있어 韓完相教授의 民衆論과 三民運動家들의 急進的 民衆論보다 약하다. 後者의 民衆論이 産業化에 따른 우리 社會의 정치, 경제적 모순에 예리한 分析을 가하고 있는데 비해 威先生의 民衆論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그의 民衆論의 호소력 감퇴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II. 1970년대말 韓完相 教授의 民衆論

韓完相教授의 民衆論에서 민중은 한마디로 말해 支配集團과 구별되는 의미에서의 被支配者들을 가리킨다. 이러한 피지배자들에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피지배자들이 모두 포함되나 그의 민중론에서는 정치적 피지배자들이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⁵⁾

그는 1970년대의 한국사회를 소수의 지배집단이 대다수의 민중을 수탈하는 사회로 보고 민중에 의한, 민중을 위한, 민중의 정부인 민주정부의 수립으로 이를 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이러한 民主政府에 있어서도 소수가 지배할 수 밖에 없으나 소수의 支配者가 民衆을 代表하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代表性과 對應性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寡頭政治와 다르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5) 韓完相, 「民衆社會學」(서울: 종로서적, 1984), pp. 16~27.

같이 代表性과 對應性을 가지고 있는 權力엘리트들은 民衆의 欲求가 변하기 때문에 평화적으로, 그리고 주기적으로 교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⁶⁾

그의 民衆論은 소수의 지배자에 의한 민중에 대한 수탈을 막자는 데 있지만 절대적인 平等社會의 實現을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다. 그는 인간의 努力과 能力에 따라 생기는 不平等은 “正當한 不平等 또는 바람직한 不平等”이며 “社會全體의 生存과 安定과 發展에 참으로 공헌하는 不平等”이라고 보고 있다.⁷⁾

그렇다면 이러한 목표는 어떻게 달성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民衆이 그들을 억압하는 非民主的 支配集團을 批判하고 진정한 의미의 民主政府의 樹立을 위해 行動하는 것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와 같이 행동하는 民衆에는, 새로운 질서의 수립은 찬동하나 그것의 樹立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行動하는 手段的 民衆과 그러한 성공 가능성이 없더라도 순교하는 마음으로 反民主的 支配秩序에 도전하는 目標指向的 民衆의 두가지가 있다. 韓教授는 가장 성숙하고 바람직한 民衆은 後者の 目標指向的인 民衆이라고 말하고 있다.⁸⁾

韓教授는 民衆이 모두 支配秩序를 批判하고 이에 도전할 수 있는 民衆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民衆에는 이러한 對自的 民衆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即自的 民衆도 있다는 것이다. 잠자는 民衆인 即自的 民衆은 對自的 民衆으로 의식화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의식화 작업에 있어서는 지식기사와 구별되는 의미에서의 지식인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그는 역설하고 있다.⁹⁾

韓教授의 民衆論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우선은 民衆의 概念에 관해서이다. 統治手段을 占有한 支配集團에는 구체적으로 누가 포함되는가? 統治手段을 점유하고 있지도 않고 統治

6) 위의 책, pp. 124~130.

7) 위의 책, pp. 114~115.

8) 위의 책, pp. 29~33.

9) 위의 책, pp. 27~28과 pp. 34~42.

에 영향력도 별로 없는 經濟的, 文化的 엘리트는 어느 집단에 속하는가? 다시 말해, 經濟的 엘리트와 文化的 엘리트가 統治手段으로부터 疎外되어 있다는 점에서 政治的, 經濟的, 文化的 비엘리트와 공통된다고 해서 경제적, 문화적 엘리트들이 非엘리트들과 같은 利害關係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다음은 韓教授의 民衆論의 目標에 관해서이다. 그가 이야기하는 “民衆에 의한, 民衆을 위한, 民衆의 政府” 혹은 “代表性”과 “對應性”을 가지고 있는 정부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政府를 가리키는 것인가? 그것은 슈페터가 말하는 엘리트 민주주의 政府인가, 오늘날 참여민주주의자들이 말하는 參與民主主義政府인가? 요컨대, 어떤 政府가 “代表性”과 “對應性”을 가진 政府인가의 문제는 그 자체가 政治學的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려운 문제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의 民衆論의 目標의 實現方法에 관해서이다. 그는 전략적으로 불리하고 성공가능성이 없어도 목표에 따라 순교자적으로 행동하는 “目標指向的” 行動이 성공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행동하는 “手段的” 行動보다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가? 전략적으로 불리하고 성공가능성이 없는 “目標指向的” 行動이 종교의 영역에서는 바람직할지 몰라도 그것이 정치의 영역에서도 바람직한 것인가? 다시 말해, 社會科學者는 民衆에게 무조건 목표에 따라 “순교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라고 권고하는 것 보다 目標實現에 효과적인 行動方式를 제시해야 되지 않는가?

또한 그는 그의 民衆論의 目標實現에 있어서 知識人の 役割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있다. 反民主的 秩序를 무너뜨리고 民主的 秩序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即自的 民衆이 意識化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意識化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知識人이므로 知識人이 없이는 그의 民衆論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民衆이 知識人の 介入이 없이는 意識化될 수 없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사적으로 보아 民衆은 知識人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들 스스로에 의해서 意識化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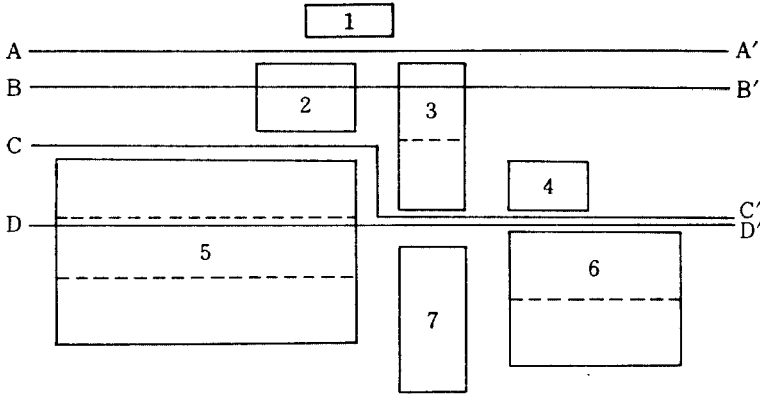
韓教授의 民衆論은 이를 社會科學的으로 엄밀하게 따졌을 때는 이상 제기한 바와 같은 여러가지 의문이 나오지만 그의 民衆論이 나온 시대적 배경인 維新時代를 고려한다면 그 實踐的意味에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그가 民衆을 무엇보다도 統治手段으로부터 疎外된 被支配集團으로 본 것은 維新時代의 가장 큰 모순인 政治的 矛盾에 기반해서 民衆을 定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經濟的 엘리트나 文化的 엘리트 중에서도 維新體制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으므로 그는 이러한 사람들도 民衆 속에 포함되어 反維新勢力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 것이다. 다음, 그의 民衆論의 目標은 維新體制와 그의 遺産을 극복하자는 데 있는 것인 만큼 실제로는 명확한 것이다. 그리고 그 目標의 實現方法에 있어서도 그가 知識人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知識人으로서 그가 歷史에 대해 가지고 있는 사명감 때문이고, 그가 批判하는 知識技士란 실제로는 維新體制와 같은 反民主的 體制的 수립과 유지에 협조한 教授, 言論人, 藝術人 등을 가리키는 것이다.

Ⅲ. 1980년대의 急進的 民衆論

1980년대의 急進的 民衆論이 나타나는 배경은 앞서 소개한 바 있는 韓完相教授의 民衆論이 나오는 배경인 維新時代와 1980년대초 光州事態와 第五共和國樹立의 歷史的 經驗이다. 韓教授의 民衆論은 1980년대 초에 처음 단행본으로 발간된 것으로 光州事態와 第五共和國樹立의 경험이 특별히 반영되어 있지는 않으나, 急進的 民衆論은 이 두 경험이 반영되어 있다.

여기서 急進的 民衆論이라는 것은 三民運動家들이 말하는 民衆論을 가리키며, 그 내용은 “민중·민주주의·민족혁명의 기본개념을 정립하

도표 1 : 급진적 민중론에서의 민중 구성



- 1:매 판 독 점 자본
- 2:신 중 산 계 급: 5%
- 3:중 소 상 공 업 자:12% 중산층: 20%
- 4:부 농: 3% 하 층: 80%
- 5:노 동 자:50%
- 6:빈 농:20% 농 촌: 23+ α : 30%
- 7:영세상인—도시빈민:10% 도 시: 77- α : 70%

A-A': 매판계급과 민중의 개념적(경제적)경제
 B-B': " 실천적(정치적)경제
 C-C': 중산층과 혁명적 민중과의 개념적 경제
 D-D': " 실천적 경제

정치적 매판계급 : 5%
 " 중산층 : 30%
 " 혁명적 민중 : 65%

자"라는 글에 잘 나타나 있다. 이 글은 총 29페이지에 달하는 지하유 인물의 형태로 1982년 6월에 발간되었다.

韓教授의 民衆論에서의 民衆은 政治的, 經濟的, 文化的 民衆으로 구성되고 그 핵은 무엇보다도 政治的 民衆이었다. 그러나 急進的 民衆論에서의 民衆은 經濟的 民衆만을 가리킨다. 韓教授의 民衆論에서

는 政治的, 經濟的, 文化的 民衆概念이 각각 獨立性을 가지고 성립될 수 있지만 急進的 民衆論에서는 政治的 民衆이나 文化的 民衆은 모두 經濟的 民衆概念에 종속되기 때문에 獨立的으로 存在할 수 없다.

急進的 民衆論에서는 우선 <도표 1>과 같이 韓國社會가 買辦獨占資本, 新中產階級, 中小商工業者, 富農, 勞動者, 貧農, 零細商人和 都市貧民이라는 7개 계급으로 構成되어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전 인구의 5% 정도가 新中產階級에, 12%가 中小商工業者에, 3%가 富農에, 50%가 勞動者에, 20%가 貧農에, 10%가 零細商人—都市貧民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상 7개의 계급 중 民衆은 개념적으로는 “買辦獨占資本家”들을 제외한 全階級을 가리킨다(도표 1에서 A-A'이하). 그러나 經營管理者, 專門技術者, 高級將校(중령 이상), 高級官僚, 大學教授, 企業화된 大病院의 醫師, 大教會의 牧師 등으로 구성되는 新中產階級과 上層中小商工業者의 일부는 “매관독점자본과 깊이 관련되어 있고” “현재의 신식민지체제에서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매관적 생활방식과 문화에 깊이 젖어 있어 민중과의 심한 거리감을 느끼며 민족의식이 희박하기 때문에” 實踐的 意味에서는 民衆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實踐的 意味에서의 民衆이란 “買辦獨占資本家”와 新中產階級과 中小商工業者의 上層部를 제외한 全階級을 가리킨다. (도표 1에서 B-B'이하).

그러나 實踐的인 意味에서의 民衆이 전부 民衆·民主主義·民族革命의 主體가 되는 것은 아니다. 新中產階級, 中小商工業者, 富農으로 구성되는 中產層은 “민중·민주주의·민족혁명의 필요성에 대해 절실하게 느끼지 않고 당위성에 대해 회의하며 전반적으로 기회주의적 태도를 나타낼 것이고” “비타협적 민중 민주주의보다는 타협적 개량주의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 革命의 이니셔티브나 指導力이나 主力量을 기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革命的 民衆은 “買辦獨占資本家”와 이들 中產層을 제외한

勞働者, 貧農, 零細商人—都市貧民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도표 1에서 C-C' 이하). 그러나 勞働者階級 중에서도 上層 技術勞働者階層은 “부농이나 하층 중소기업자와 비슷한 생활수준을 가지고 있고” “생활의 증산증화가 상당히 진전되어” “의식의 증산증화”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개념적으로는 革命的 民衆에 포함되지만 實踐的 意味의 革命的 民衆에는 포함될 수 없다고 한다. 그리하여 실천적 의미의 革命的 民衆은 上層 技術勞働階層을 제외한 勞働者階級, 貧農, 零細商人—都市貧民으로 구성되고 그들이 전인구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도표 1에서 D-D'이하). 急進的 民衆論에서의 民衆의 핵은 바로 이 實踐的 意味에서의 革命的 民衆인 것이다.¹⁰⁾

韓教授의 民衆論에서는 民衆의 핵이 統治手段으로부터 소외된 정치적 민중이기 때문에 中産層도 이에 포함될 수 있으나 急進的 民衆論에서는 中産層은 이에 포함될 수 없다. 韓教授의 民衆論에 있어서 의식이 깨어있는 對自的 民衆은 어떤 계급보다도 오히려 증산증에서 많이 발견될 것으로 예상되나, 급진적 민중론에서는 勞働者, 貧農, 零細商人—都市貧民은 그들의 의식이 잠들어 있던 깨어있던 간에 그들의 경제적 위치에 따라 자동적으로 革命的 民衆이 되는 것이다.

다음, 急進的 民衆論에서 實踐的 意味의 革命的 民衆이 주체가 되어 실현하고자 하는 目標은 무엇인가? 韓教授가 그의 民衆論의 目標로 代表性과 對應性이 있는 民主政府의 樹立을 제시하고 있는 데 비해 急進的 民衆論은 “帝國主義”와 “買辦獨占資本”을 타도하고 民衆·民主主義·民族革命을 성취할 것을 그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韓教授의 民衆論의 가장 중요한 타도대상은 反民主的 政權이나 急進的 民衆論의 그것은 “帝國主義”와 “買辦獨占資本”인 것이다.

急進的 民衆論의 타도대상이 “帝國主義”와 “買辦獨占資本”이라고 해서 이에 政權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急進的 民衆論에서는 現政權을 “팻쇼 군부정권”이라고 보고 이를 타도의 대상으로 삼고

10) “민중·민주주의·민족혁명의 기본개념을 정립하자,” pp. 13~20.

있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 “팃쇼 군부 정권”은 “제국주의”의 후원을 받고 있고 이에 종속되어 있는 “매관독점자본”에 매수되어 있다는 것이다. “제국주의 정부가 때때로 민주화를 지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파시스트의 지나치게 과격한 행동으로 한국정치가 불안정하게 되는 것을 막자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¹¹⁾ 다시 말해, “민주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安定 즉 현상유지가 목적”이라는 것이다. “매관독점자본”은 民衆 수탈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민중억압기구인 “팃쇼” 政權이 필요한데, 이 계급은 “팃쇼”정권을 스스로 수립하는 어려움을 겪지 않고 “수립된 팃쇼정권을 매수하고 있다”는 것이다.¹²⁾ “매관독점자본”은 1953년 이후에 있어서는 100년 전의 封建地主階級の 자리를 완전히 빼앗아 한국의 새로운 支配階級이 되었고 그 이후의 政權은 이 지배계급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急進的 民衆論에서는 “팃쇼군부정권”의 타도도 중요하지만 “帝國主義”와 “買辦獨占資本”의 타도가 궁극적인 목표인 것이다. 急進的 民衆論에 의하면 “帝國主義”와 “買辦獨占資本”의 타도 없이는 “어떤 선의의 정치세력이 세우는 정권도 매관독점자본과 협력하고 이에 매수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¹³⁾ 急進的 民衆論은 政治를 外勢와 經濟의 從屬變數로 보고 外勢와 經濟의 支配勢力의 타도를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政治의 獨自性을 인정하고 反民主的 性格을 가진 政治的 支配勢力의 타도를 중요시하는 韓教授의 民衆論과는 다른 것이다.

急進的 民衆論에서 “帝國主義”, “買辦獨占資本” 및 “팃쇼軍部政權”을 타도하고 이룩하고자 하는 목표는 “民衆・民主主義・民族革命”이다. 여기서는 革命의 主體가 유럽의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에서와 같이 부르조아계급이 아니라 民衆인 것이며, “혁명이 건설할 정치체제 역시 부르조아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중이 지배하는 민중 민주주의

11) 위의 油印物, p. 13.

12) 위의 油印物, p. 11.

13) 위의 油印物, p. 34.

이다.” 그리고 이것이 民族革命인 것은 그것이 곧 “反帝·反買辦獨占資本革命”이며 그 革命이 건설할 새 經濟體制는 “民族革命型” 經濟體制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¹⁴⁾

이러한 혁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統治機構와 經濟體制를 채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언급이 없지만 革命이 개선해야만 하는 오늘의 상황으로 急進的 民衆論은, ① 大衆의 生活苦, ② 大衆의 肉體的인 病과 精神的인 病 ③ 自然破壞(公害), ④ 大衆의 言論, 出版, 集會, 結社, 罷業의 自由에 대한 억압과 學問과 文化와 教育의 自由發展에 대한 억압, ⑤ 진리의 왜곡과 위선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개선이 急進的 民衆論의 보다 구체적인 政策的 目標인 것이다.¹⁵⁾

이제 우리는 急進的 民衆論이 이러한 革命을 하기 위한 方法으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살펴 볼 차례이다. 우선 急進的 民衆論은 그 목표를 “타협적이고 개량주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운동”이 아니라 非妥協的인 革命運動에 의해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急進的 民衆論은 이러한 혁명을 가능케 하는 두 요소로 客觀的 條件과 主體의 力量을 들고 있다. 여기서 客觀的 條件이란 “구체적 단기적인 단 위지역혁명에서는 경제적 조건 뿐만 아니라 경제적 조건의 복잡 혹은 단순 반영으로서의 혹은 상당히 독립된 변수로서의 정치적, 군사적, 국제정치적, 문화적 제조건”을 의미하고 주체적 역량은 “혁명적 지식 인의 정치의식과 조직, 대중의 정치의식과 조직, 그리고 이 양자간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力量이다. 또한 “주체적 역량은 오로지 투쟁을 통해서만 성장하고, 혁명의 최종적 승리 이전의 모든 투쟁은 바로 혁명적 주체역량의 성장수단”이다. 그리고 모든 戰術的 選擇, 政策的 決定은 그것이 革命運動의 主體의 力量을 키우는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 결정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¹⁶⁾

14) 위의 油印物, pp. 1~3.

15) 위의 油印物, pp. 3~5.

16) 위의 油印物, pp. 5~6.

民衆民主主義者들은 大衆을 사이에 둔 그들과 “파시스트”와의 이데올로기 투쟁에 있어서 그 手段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결국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에 의하면 텔레비죤, 라디오, 신문의 모든 매스컴이 “적”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으나 매스컴은 “겨우 대중의 의식의 얇은 표면층만 뚫고 들어갈 수 있을 뿐이며, 그 밑바닥의 거대한 잠재의식에는 바위와도 같이 딱딱한 사회현실(존재)이 뚜렷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대중은 “스스로 의식하든 못하든 민중민주주의자들의 말이 아무리 작은 목소리로 전달될지라도 그것이 대중이 자신들의 생활경험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회현실을 정직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한, 옳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혁명적 지식인의 의식과 조직,” 그리고 대중의 의식과 조직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성장해 나가, 양자가 깊고 넓게 결합했을 때 [그것은] 아무도 막지 못하는 힘이 된다”는 것이다.¹⁷⁾

다음, 革命을 위한 투쟁은 어떠한 形式을 취해야 할 것인가? 暴力的 鬪爭의 形式을 취할 것인가, 非暴力的 鬪爭의 形式을 취할 것인가? 急進的 民衆論에서는 문제를 이와같은 방식으로 제기하는 것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폭력·비폭력의 문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 요구하는 투쟁수단의 문제이지 어떤 경우에도 변할 수 없는 투쟁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폭력주의, 비폭력주의는 둘 다 모두 수단을 목표시하는 오류”라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투쟁방법은 자유로운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객관적 조건에 의해 강제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에 있어 客觀的 條件은 어떠한 鬪爭方法을 강제하고 있는가? 急進的 民衆論은 韓國의 경우 合法政黨活動을 통한 革命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유럽에서와 같이 완전한 政治的 自由가 보장되고 自由民主主義가 實現된다면 合法政黨活動을 통한 民衆·民主主義·民族革命이 가능해질 것이나—이것은 民衆民

17) 위의 油印物, p. 7.

主義者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행복한 발전의 길”이나— 서유럽에서와 같이 파시스트를 견제하여 自由民主主義를 實現시킬 수 있는 政治勢力도 없고 그곳의 독특한 政治文化도 가지고 있지 않은 韓國에서는 自由民主主義의 實現과 合法政黨活動을 통한 民衆民主主義 革命의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民衆의 끊임없는 촉구에도 불구하고 “買辦파시스트”들은 自由民主主義를 거부해 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때문에 民衆民主主義者들은 그들의 희망과는 관계없이 韓國의 民衆·民主主義·民族革命은 “정치투쟁만으로는 성취될 수 없고 결국 무장투쟁의 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무장투쟁에는 “농민이 주역이 되어 농촌지역에서 장기적으로 벌이는 게릴라전”과 “노동자와 영세상인 도시빈민 학생 등 도시민중에 의한 단기적 전격적인 민중무장봉기 혹은 내전”의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韓國의 경우에는 後者の 武裝鬭爭이 적합하다고 急進的 民衆論者들은 잠정적 결론을 내리고 있다.¹⁸⁾

끝으로 急進的 民衆論者들은 그들의 運動을 현재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急進的 民衆論者들의 평가에 의하면 1982년 6월 현재 學生運動과 知識人 文化運動은 어떠한 탄압에 의해서도 꺾일 수 없는 단계까지 질적, 양적 成長을 하였으나 靑年運動은 그 잠재적 지도역량과 대중역량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독자적인 전통을 확립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勞動運動, 農民運動, 零細商人—都市貧民運動으로 구성되는 民衆運動은 아직도 運動의 獨自성과 대중적 기초를 확립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合法的 政黨活動도 정치활동규제 때문에 활발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들의 평가이다. 현실에 대한 이와같이 상당히 客觀的인 판단 위에서 그들은 앞으로의 투쟁을 통한 革命力量의 강화를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¹⁹⁾

18) 위의 油印物, pp. 8~10.

19) 위의 油印物, pp. 21~29.

요약컨대, 急進的 民衆論에서의 民衆은 상층 기술노동계층을 제외한 勞動者階級, 貧農, 零細商人—都市貧民을 가리키고 그 實現目標은 “帝國主義”, “買辦獨占資本”, “팻쇼軍部”政權을 타도하고 民衆·民主主義·民族革命을 달성하는 것이며, 오늘날의 우리 상황에서는 自由民主主義의 實現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는 결국 都市民衆의 武裝暴動을 거치지 않고서는 성취될 수 없다는 것이다.

急進的 民衆論은 여러가지 각도에서 평가될 수 있지만 그 내부적 이론구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우선 民衆概念에 대해서이다. 급진적 민중론에서의 民衆은 실제에 있어 上層 勞動者를 제외한 勞動者階級, 貧農, 零細商人—都市貧民을 가리킨다. 急進的 民衆論者들은 中產層화된 勞動者들도 實踐的 意味에 있어 革命的 民衆이 될 수 없다고 한다. 그들이 中產層이나 中產層화된 勞動者들까지 實踐的 意味의 革命的 民衆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개량주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들은 기존체제의 유지를 최소한 목인해 온 계급이기 때문에 혁명적 民衆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急進的 民衆論者들이 말하는 革命的 民衆도 既存體制를 목인해 온 계급이며 이 계급이 既存體制에 대해 中產層보다 더 강력하게 반대했다는 증거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힘들다.

둘째로 革命的 民衆을 구성하는 勞動者, 貧農, 零細商人—都市貧民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박현채氏が 잘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資本主義의 전개와 더불어 농민의 分解와 分化가 일어나고 그것은 농민층의 脫農民化와 이에 따른 都市貧民, 勞動者의 生成過程으로 연결되어 農民, 都市貧民, 勞動者는 서로 관련지어진 순환계열상의 다른 범주로 되면서 하나가 되어, 그들은 資本主義의 전개과정의 희생자임에는 틀림없으나 그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相互對立的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먼저 勞動者階級은 그들이 받는 低勞賃으로 인해 低農產物價格을

요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高農產物價格을 원하는 貧農과 대립한다. 또한 貧農은 결국 脫農民化되어 산업에비준으로 노동시장에 편입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시장에서 勞働者계급의 경쟁자가 되는 것이다. 다음 勞働者계급과 都市貧民은 노동시장에서 경쟁적 관계에 서게 될 뿐만 아니라 生活意識에 있어서도 서로 다르다. 박교수는 노동자의 의식이 生産者的인데 대하여 都市貧民의 의식은 寄生的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都市貧民은 極左에서 極右, 極右에서 極左로의 극단적 선회를 되풀이하는 불안정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貧農과 都市貧民 간에도 生産者와 寄生的 生活者 간의 생활의식의 차이가 있어 농민은 도시빈민을 保守的으로 차별지운다는 것이다. 박현채씨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으로 구성되는 民衆이 하나의 社會的 實體가 되기 위해서는 이들이 지니는 상호간의 모순이 民衆의 차원에서, 그리고 역사의 進步의 선에 따라 統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결코 이루기 쉬운 일이 아니다.²⁰⁾

한다디로 말해, 急進的 民衆論에서의 민중은 현재에 있어서는 社會的 實體가 아니고 急進的 民衆論者들의 개념에 불과한 것이다.

다음은 急進的 민중론의 실현목표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急進的 민중론의 소극적 의미의 실현목표는 “帝國主義”, “買辦獨占資本”, “팻쇼軍部政權”을 타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급진적 민중론의 가장 중요한 타도대상은 “買辦獨占資本”이고 “매관독점자본”은 우리나라의 大企業들과 財閥들을 가리킨다. “買辦獨古資本”은 外國자본에 종속되어 있고 외국자본의 이익에 봉사하는 자본을 의미하는데 韓國의 大企業들이 과연 외국자본에 종속되어 있고 외국자본의 이익에 봉사하고 있는가는 경험적으로 따져 볼 문제인 것이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外債를 가지고 있지만 資本의 所有主는 대부분 한국사람들이고 그 운영도 대부분 한국인들이 맡고 있는 것이다. 이점이 한국의 大企業들이

20) 박현채, “민중의 계급적 성격규명,” 김진균외, 「한국사회의 계급연구(1)」(서울: 한울, 1985), pp. 49~56 참조.

자본의 소유주가 外國人이고 그 운영도 외국인인 말고 있는 경우가 많은 라틴 아메리카諸國의 대기업들과 다른 점이다.²¹⁾

急進的 民衆論은 政權樹立 계기의 獨自性을 인정하면서도 그 政權이 수립된 후에는 “買辦獨占資本”에 매수된다는 근거에서 타도의 궁극적 목표를 “買辦獨占資本”에 두고 있는데, 이와같은 인식방법과 목표설정에도 문제가 있다. 우선 韓國의 歷代政權이 “買辦獨占資本”에 매수된 정권이었는가?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의 지배계급은 1953년 이래 “매관독점자본”인가? 한국의 역대 정권은 국가를 건설하고 産業化를 추진하는 데 앞장서 왔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가들이 큰 혜택을 본 것이지 이 혜택이 그들에 의한 역대정권의 매수의 결과는 아닌 것이다. 물론 기업가들이 집권자들의 경제적 뒷바라지를 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양자간의 역학 관계는 집권자들에게 항상 유리한 관계였다. 최근 대기업가들의 발언권이 강화되고 있고 앞으로는 더 강화되어 그들이 國家機構의 최고 관리자들을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할는지 모르나 아직까지 韓國의 支配者는 국가기구의 최고 관리자들이었지 大企業家들이 아니었다. 국가기구의 최고 관리자들은 建國 初期부터 外國의 軍事的, 經濟的 지원에 힘입어 그 기구를 사회영역을 압도하는 힘을 가진 막강한 기구로 성장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²²⁾

急進的 民衆論의 적극적 의미의 실현목표는 민중이 지배하는 民衆民主主義 體制이고 경제체제는 民族革命經濟이다. 우선 民衆이 지배하는 민중민주주의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치체제를 가리키는가? 그것은 서구식 自由民主主義의 체제인가, 프롤레타리아 革命論者들이 말하는 프롤레타리아 獨裁體制인가, 그렇지 않으면 前者도 後者도 아닌 제3의 체제인가? 急進的 民衆論者들은 서구식 自由民主主義로의

21) 임현진, *Dependent Developmnt in Korea : 1963~1979* (서울 : 서울대출판부, 1985) 참조.

22) 李正馥, “産業化와 政治體制的 變化”, 『韓國政治學會報』, 第19輯(1985), pp. 61~75 참조.

발전이 가능만 하다면 그것이 행복한 발전의 길이라고 하면서도 이는 우리 상황에선 불가능하다고 결론짓고 民衆民主主義體制의 樹立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것이 서구식 自由民主主義體制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민중민주주의체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체제인가? 急進的 民衆론은 이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 다음 民族革命經濟체제의 의미도 모호하다. 그것이 “反帝”, “反買辦獨占資本” 체제라고 할 때 이들을 타도한 다음에 生産手段의 私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인지,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여기서 우리는 自由民主主義體制와 自由企業體制에 대한 맹신에서 急進的 民衆論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급진적 민중론자들이 말하는 自由民主主義체제의 문제점,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모순을 부정하지 않으며 그것이 가능한 한 빨리 改革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문제는 급진적 민중론이 민중민주주의체제가 어떠한 의미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보다 나은 체제이고 민족혁명경제체제는 어떠한 의미에서 현존 자유기업체제보다 나은 체제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득력있게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데 있다.

마지막으로 급진적 민중론의 목표 實現方法에도 문제가 있다. 첫째로 급진적 민중론자들은 그들이 채택하는 투쟁방법이 폭력적이든 아니든 그것이 객관적 조건에 의해 강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옳다는 獨斷主義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객관적 조건이 투쟁방법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人間の 판단이 투쟁방법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인간의 판단은 사람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IV. 結 語

韓國의 民衆論도 外國의 民衆主義運動²³⁾과 마찬가지로 資本主義 발전 과정에 있어서 일어난 社會·경제적 모순과 정치적 모순에 대한 반응으로 대두하였다. 1950年代 後半과 1960年代 前半의 都市民들, 특히 都市中産層의 불만, 1970年代의 産業化와 貧富間의 隔差深化, 그리고 강력한 권위주의 체제인 維新體制에 대한 우리 사회 각계 각층의 광범위한 불만, 光州事態와 제 5共和國 樹立 후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상황에 대한 靑年學生들과 知識人들의 불만이 각각 威錫憲先生의 民衆論, 韓完相教授의 民衆論, 그리고 三民運動家들의 急進的 民衆論의 대두 기반이 되는 것이다.

韓國의 民衆論은 知識人들이 주창하였고 그 운동도 지식인들에 의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農民들과 勞働者들이 밑으로부터 自律的으로 일으킨 19세기 말 美國의 民衆主義운동이나 政府內의 지도자가 이룩한 운동을 일으킨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경우와는 다르다. 韓國의 민중론과 민중주의운동은 그 주창자와 추진세력의 특성으로 보아서 러시아, 베네수엘라, 페루의 경우와 비슷하다. 그러나 美國, 러시아, 라틴아메리카諸國의 민중주의 운동가들이 카리스마적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비해 한국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威錫憲先生이 1950年代 後半과 1960年代 초에 약간의 카리스마를 가졌을 뿐이다. 한국의 民衆論이 民衆運動으로 크게 발전하지 못한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기도 하다.

韓國의 民衆論에서 민중개념이 外國에서와 마찬가지로 階級的으로 파악되기 시작한 것은 1980年代에 들어와서이다. 한국의 경우 민중개념이 최근에 와서야 階級的으로 파악되기 시작한 것은 그간 당국이

23) Mickael L. Conniff, ed. *Latin American Populism in Comparative Perspective* (Albuquerque: Univ. of New Mexico Press, 1982) 참조.

階級論에 대해 容共의 시각을 가져왔다는데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이 미국, 러시아, 라틴아메리카諸國보다 늦게 시작했다는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1950年代 후반과 1960年代의 威先生の 민중론에서의 민중은 中産層이나 階級성립 이전의 원초적인 의미에서의 民을 가리키고, 1980年代 초의 韓完相教授의 민중론에서 민중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소외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나 그 중에서도 핵은 政治的 민중이고, 急進的 민중론에서는 민중을 노동자, 빈농, 영세상인—도시빈민으로 국한시키고 있다. 오늘날 한국의 急進的 민중론에서의 민중은 라틴아메리카諸國의 민중론에서와 같이, 產業資本家中産層, 勞動者, 農民이 모두 포함되는 광범위한 多階級聯合이 아닌 것이다. 우리의 경우에는 민중론과 민중운동이 아직도 青年學生들의 운동수준에 머물러 있고, 민중개념은 그들에 의해 좁혀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民衆論에서 민중의 범위가 점점 축소된 것에 상응해서 민중론의 실현목표도 急進化되어 民族國家·民主主義체제를 수립하는 것으로부터 오늘날에는 노동자, 빈농, 빈민들이 “帝國主義”, “買辦資本主義”, “갓쇼軍部政權”을 타도하고 民衆民主主義 民族革命을 달성하는 것으로 변하였다. 미국의 민중주의 운동의 요구가 상당부분 민주당에 의해 정책적으로 흡수됨으로써 그 운동의 勢가 꺾이고, 라틴아메리카諸國의 경우는 民衆政治家들이 政權을 장악함에 따라 多階級聯合의 분해가 일어났었다. 우리의 경우 民衆論과 民衆運動은 라틴아메리카諸國의 경우와 같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고 그 목표가 이론적으로 急進化되고 있을 뿐이다.

한국의 민중론에 있어 그 목표의 實現方法도 목표 자체가 急進化된 것과 마찬가지로 과격화되었다. 1950年代 말과 1960年代의 威先生の 民衆論은 비폭력주의와 평화주의에 기반한 목표실현을 주장했으나 1980년대의 급진적 민중론은 목표실현을 위해 폭력주의의 채택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점에 있어 한국의 민중론은 미국이나

라틴 아메리카諸國의 패턴이 아니라 아주 먼 의미에서나마 19세기말 러시아의 민중주의운동에 가깝게 전개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한국의 민중론과 민중운동은 그간 民主化運動의 일익을 담당해 왔으나 産業化의 모순과 權威主義政治의 모순이 심화됨에 따라 점점 급진화되어 왔다. 급진적 민중론이 앞으로 일층 급진화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온건화될 것인지의 여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화의 成敗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다.